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

출제자 : 김중근T

2018. 04. 11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 20

형 소 법

1.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 (가) 영장주의
(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다) 일사부재리원칙
(라) 자백배제법칙
(마)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바) 증거보전청구권

① 나, 라, 마 ② 다, 바 ③ 나, 마, 바 ④ 가, 다, 바

2.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불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3.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③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밀수범인 주한 외국 대사를 상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우리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O, X)연결이 올바른 것은?

-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불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① ㉠ (O) ㉡ (X) ㉢ (X) ㉣ (X)
② ㉠ (O) ㉡ (O) ㉢ (X) ㉣ (X)
③ ㉠ (X) ㉡ (O) ㉢ (O) ㉣ (O)
④ ㉠ (O) ㉡ (X) ㉢ (X) ㉣ (O)

5.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 중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한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련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와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7.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8. 적법절차의 원칙,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제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③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9.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위반을 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피고인은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동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할지정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 ③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는 정지된다.
- ④ 관할지정신청을 받은 직근상급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법원을 정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기각결정을 한다.

10. 다음 중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에 관여한 바 있으나 공판도중에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판결정정절차에 관여하였다면 제척 원인이 된다.
-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O, X)연결이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① ㉠ (O) ㉡ (X) ㉢ (X) ㉣ (X)
- ② ㉠ (X) ㉡ (X) ㉢ (X) ㉣ (O)
- ③ ㉠ (X) ㉡ (O) ㉢ (O) ㉣ (O)
- ④ ㉠ (O) ㉡ (X) ㉢ (O) ㉣ (X)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이나 동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관할이전은 성질상 사물관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 ③ 관할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신청하는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 ④ 검사의 관할이전신청은 의무적이나, 피고인의 관할이전 신청은 권리이다.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실제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① 없음 ② ㉡ ③ ㉠, ㉡ ④ ㉠, ㉡, ㉢

14.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기피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5.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②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6.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 ③ 미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한다.
-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③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18.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 ②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19.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③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2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과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사건은 합의부 심판이 원칙이다.
-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관할위반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 검증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이후의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h1>Avengers Evening Review Test</h1> <h2>정답 및 해설</h2>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 출제자 : 김중근T 2018. 04. 11	이름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맞은개수 <input type="text"/> /20
--	--	--

형 소 법

[정답]1. ③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는 절차이다.

[정답]2. ④

- ㉠ [O] 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 ㉡ [O]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 ㉢ [O]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 ㉣ [O]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 ㉤ [O] 재판공개 원칙(헌법 제109조)

[정답]3. ③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05.13. 선고 2009도1 4442).

[정답]4. ①

- ㉠ (O) 현재 2001.8.30. 99헌마496
- ㉡ (X)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헌재결 2001.6.28. 99헌가14).
- ㉢ (X)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7.27. 2005헌바58).
- ㉣ (X)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피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소멸되어 권리보호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고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헌재결 1993.11.25. 92헌마169).

[정답]5. ②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치료감호를 사회보호위원회가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치료감호자 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사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치료감호자 등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헌재 2005.2.3. 2003헌바1).

[정답]6. ④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4.12. 2002도944).

[정답]7. ③

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정답]8. ③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구별되므로 접견의 빈도 등이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제한하더라도 접견 횟수에 대한 탄력적 운용, 서신 및 집필문서 발송, 전화통화에 의하여 소송준비 또는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 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4.12.16. 2002헌마478).

[정답]9. ①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4조)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

⇒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은 신청권이 없다.



[정답]10. ③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경정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상고법원은 동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67.1.18. 66초67).

[정답]11. ①

- ㉠ (O) 대법원 2016.6.16. 자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 (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조,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8. 자91모24결정).
- ㉢ (X)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 중에 특히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3.11.27. 2002헌마193).
- ㉣ (X)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형소법 제8조 제2항). 즉 재판 중 판결이 아니라 결정형식이다.

[정답]12. ②

관할이전은 성질상 토지관할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상고심에서는 관할이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13. ②

- ㉠ [X]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헌재 1992.04.14. 90헌마82).

- ㉡ [O] 소송촉진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X]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인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정답]14.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조).

[정답]15. ④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16.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9.22. 91도3317).

[정답]17. ④

간접피해자를 포함시킨다면 제척의 범위가 불분명해지므로 직접피해자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정답]18. 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04.14. 선고2010도13583).

[정답]19. ③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없다.

[정답]20. ①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조 제2항).